

| 공고일 | 제목 | 법령 | 유형 | 관할관청 | 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 | 시행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|
| 2025-01-17 | 네이버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| 표시광고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(유료 구독 서비스) 관련 포인트 적립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.</p> <p>2. 위반 내용:</p> <p>A. 포인트 적립 광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최대 5% 적립'이라 광고했으나, 실제로는 월 20만 원까지만 5% 적립, 이후 2% 적립. - 제한 조건을 광고 본문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. <p>B. 디지털콘텐츠 이용 광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5개 콘텐츠 무제한 이용'처럼 광고했으나, 실제로는 매월 1개만 선택 가능. - SPOTV NOW 이용도 '무제한'이라 광고했으나, 선택한 5명의 한국 선수 경기만 시청 가능. <p>3. 공정위 조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만 광고로 판단, 시정명령(향후 금지명령) 부과. | |
| 2025-01-17 | 이음엘엔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| 하도급거래 공 정화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이음엘엔디는 "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" 발주자로,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음.</p> <p>2. 문제 발생: 2023년 9월,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었지만, 수급사업자 B사에 2억 2,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.</p> <p>3. 이음엘엔디 주장: 신탁회사와 정산이 끝나지 않아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해명.</p> <p>4. 공정위 판단: 지급 지연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,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위반.</p> <p>5. 제재 조치: 시정명령(대금 지급 명령, 재발방지 명령) 부과.</p> | |
| 2025-01-22 | 20개 시스템 가구 사업자 입찰 담합 제재 | 공정거래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2012년~2022년 동안 20개 가구사가 16개 건설사의 시스템 가구 입찰(총 190건)에서 담합.</p> <p>2. 담합 방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모임 및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. - 들러리 업체에 공사 물량 또는 금전 제공. - 입찰 전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공유. <p>3. 결과: 190건 중 167건(약 88%)에서 담합 참여 업체가 낙찰, 평균 낙찰율 100%에 근접.</p> <p>4. 공정위 조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183억 원 과징금 부과. - 4개 업체(동성사, 스페이스맥스, 자마트, 한샘) 고발. | |
| 2025-02-03 |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| 하도급거래 공 정화법 | 시행 | 공정거래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- 연동계약 체결 방법, 탈법행위 유형, 연동계약 서면 작성·보존 절차 명확화. - 원재료 가격 변동 반영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침 마련 | 2025-02-03 |

| 공고일 | 제목 | 법령 | 유형 | 관할관청 | 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 | 시행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2025-02-03 |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가이드라인 |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| 시행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연동제 적용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(key raw materials) 가격 변동 시 연동제 적용. - 핵심 원자재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·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. - 10% 미만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연동제 적용 가능. <p>2. 연동제 계약 절차 정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면 계약 체결 → 연동 조건 명시 → 성실한 협의 → 대금 조정 및 지급 → 문서 보관 등의 절차 명확화. <p>3. 불법 행위 예시 명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거부 강요. - 계약은 짜개 하도급 대금을 낮추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연동제 적용 회피. | 2025-02-14 |
| 2025-02-04 | 부동산 개발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|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부동산 개발사가 오피스텔 분양 영업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.</p> <p>2. 위반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→ 공사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. - 부당한 계약 조건 포함 → 하도급 업체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계약 즉시 해지. - 계약 해지 시 잔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. - 대금 미지급 → 계약 해지 후 약 4억 원(400백만 원) 미지급. <p>3. 공정위 조치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정명령(수정 계약 및 미지급 대금 지급 명령) 부과. | 2025-01-07 |
| 2025-02-04 |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사전 예고 |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| 행정예고 | 공정거래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명시 - 부당특약 유형 명확화 예정 | |

| 공고일 | 제목 | 법령 | 유형 | 관할관청 | 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 | 시행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|--|-----|
| 2025-02-10 | 에스티유니타스 부당 광고행위 제재 | 표시광고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에스티유니타스(공단기)가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광고에서 거짓·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.</p> <p>2. 위반 내용: - 허위 합격률 광고 "합격생 10명 중 8명(또는 7명)이 공단기 출신"이라는 문구로 광고. 실제 합격률(49.59~66.20%)보다 부풀려 거짓·과장 광고.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. 광고의 제한 조건(합격률 기준 등)을 배경색과 유사한 작은 글씨(11pt)로 표시, 사실상 인식 어려움. - 1위 광고 조작 "전산직 수험서 1위, 매출 1위, 수강생 수 1위" 등 광고. 1위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.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높음.</p> <p>3. 공정위 조치: 시정명령(공표명령 포함) 및 과징금 1억 900만 원 부과.</p> | |
| 2025-02-10 | 한국은거래소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| 전자상거래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한국은거래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.</p> <p>2. 위반 내용: - 청약철회 후 환불 거부: 2022년~2024년 동안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미배송되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총 21억 6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지연 환불. - 거짓·과장된 사실로 소비자 유인: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도 쇼핑몰 공지에 "빠짐없이 물건을 보내고 있다", "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" 등 허위 내용 게시. - 청약철회 방해: 교환/반품 안내에 "**귀금속류는 주문 제작이라 교환·환불 불가"라고 표시.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 - 시정조치 불이행: 남양주시 별내동장이 대금 미환급 관련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이를 수락했으나,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 조치 후 나머지는 불이행.</p> <p>3. 공정위 조치: - 영업정지 4.5개월 및 과태료 750만 원 부과. - 회사 및 대표자 검찰 고발(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원 가능).</p> | |

| 공고일 | 제목 | 법령 | 유형 | 관할관청 | 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 | 시행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|
| 2025-02-10 | 케이지모빌리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| 하도급거래 공 정화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케이지모빌리티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.</p> <p>2. 위반 내용: - 서면발급 의무 위반: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, 웹밴(Webvan)을 통해 부품 소요 계획만 통보. 웹밴에는 품명, 날짜, 소요량만 기재하고, 하도급 대금, 지급 방법, 지급 기일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. - 하도급법 위반: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, 하도급업체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력이 약화됨.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(서면발급 의무) 위반이라고 판단.</p> <p>3. 공정위 조치: - 시정명령 부과(서면발급 및 계약 방식 개선 요구).</p> | |
| 2025-02-21 | 하도급대금 선급금 미지급 제재 (중아건설) | 하도급거래 공 정화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- 중아건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선급금 14억 원을 수령했으나, 7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6,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.</p> <p>2. 위반 내용: A.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음 -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내 지급해야 하는데 기한 초과 미지급. B.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 거부 - 중아건설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,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.</p> <p>3. 적용 법조항: -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위반(선급금 미지급).</p> <p>4. 공정위 조치: - 시정명령 부과(재발방지 및 대금 지급 명령).</p> | 2025-02-21 |

| 공고일 | 제목 | 법령 | 유형 | 관할관청 | 주요 제·개정(입법예고) 내용 | 시행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|
| 2025-02-21 |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 강요 제재 (효성중공업) | 하도급거래 공 정화법 | 제재 | 공정거래위원회 | <p>1. 사건 개요: -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자 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3,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강요.</p> <p>2. 위반 내용: A. 공사대금 대납 요구 - 효성중공업이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김. - 구두 지시만 있었고, 정식 협의나 계약서 명시는 없었음. B.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요구 - 효성중공업은 하도급업체가 초과 기성금을 받은 대신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, 공정위 는 대납 요구가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 행위라고 판단.</p> <p>3. 적용 법조항: -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(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).</p> <p>4. 공정위 조치: - 시정명령(향후 금지명령) 부과.</p> | 2025-02-21 |